



I. 북한동향

1. 대내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동해안 섬방어대 또 시찰...포사격 지도(7/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 전방의 섬 초소인 옹도방어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명령으로 사격훈련이 시작됐고 "하늘땅바다를 진감하는 포성과 함께 강철 포신에서 세찬 화염이 쏟아졌다"고 중앙통신은 전함.
 - 그는 이어 방어대 특성에 맞는 훈련을 해 포의 기동시간을 단축하고 화력진지와 기동로를 더욱 견고히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단 싸움이 벌어지면 우리 해상에 기여드는 원수들을 해상에서 모조리 수장해버림으로써 조국땅에 침략의 더러운 발을 한치도 들여놓지 못하게 옹도방어대를 명포수 방어대로 만들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은, 영도업적 계승자...내부의 적과 싸워야"(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도 업적은 선군조선의 영원한 생명선이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혁명과 건설의 모든 사업을 수령님(김일성)과 장군님(김정일) 식대로, 대원수님들의 유훈대로 해나가는 길에 승리와 번영이 있다는 것이 우리 당의 드팀없는 입장"이라며 "100% 고수, 100% 계승"이 당의 원칙이자 신념이라고 밝힘.
 - 이어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업 방식을 '0.001mm의 편차'도 없이 따르고 있다며 "김정은 원수님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것은 대원수님들의 영도 업적을 빛내며 주체혁명 위업의 최후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 담보"라고 주장함.

- **北 김일성 '통일문전' 서명일 맞아 '통일 업적' 강조(7/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잊지 말자, 불멸의 친필과 더불어 빛나는 고귀한 업적'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김 주석의 마지막 친필 서명에는 "조국통일을 필생의 염원으로 간직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위인(김일성 지칭)의 한 생이 집대성돼 있다"고 역설함.
 - 신문은 이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012년 3월 최전방 판문점을 찾아 김 주석의 마지막 친필 서명이 새겨진 '친필비'를 바라보며 김 주석의 '통일 업적'을 길이 빛낼 결의를 다졌다고 밝힘.

- **北 김정은, 김일성 20주기 맞아 금수산태양궁전 참배(7/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의 20주기인 8일 0시



김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참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총참모장, 현영철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국장, 서흥찬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박영식림철성 중장, 조정철 보위사령관 등 군 지도부가 함께했다고 통신이 보도함.

● **北 오늘 김일성 20주기...추모 열기 고조(7/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사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김일성)의 한평생의 업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후손만대의 존엄과 영광, 승리와 번영이 확고히 담보돼 있다"며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열어주신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역세계 나아갈 확고부동한 신념을 지녀야 한다"고 밝힘.
- 이어 "김정은 동지는 백두산대국의 강대성의 상징이시며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운명이시고 미래"라며 "김정은 동지를 영도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신 우리 당과 혁명, 우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은 창창하며 최후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강조함.

● **北, 김일성 20주기 추모대회...김정은 다리 절며 참석(7/8, 조선중앙TV)**

- 북한은 8일 평양체육관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김일성 주석 20주기 중앙추모대회를 개최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중앙TV에 따르면 8일 추모대회에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추모사를 통해 "혁명위업 계승 문제를 빛나게 해결하신 것은 위대한 김일성 동지께서 조국과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이룩하신 업적 중의 업적"이라고 밝혀 김 제1위원장의 세습을 정당화함.
-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국가와 사회의 주인으로 되고 모든 것이 인민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사회주의"라며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가장 공고한 사회주의, 주체성과 민족성이 강한 자주적인 사회주의"라고 강조함.

● **北 '핵개발 주역' 전병호 전 군수담당 비서 사망(7/9, 조선중앙통신)**

-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국방위원회는 공동 명의의 부고를 통해 육군 대장이자 인민군 무장장비관 명예관장인 전병호가 지난 7일 오후 7시 급성 심근경색으로 88세의 나이에 사망했다고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부고는 전병호에 대해 "오랜 기간 국방공업 부문의 중요 직책들을 역임하면서 인민군대를 현대적인 공격수단과 방어수단을 갖춘 최정예 혁명 강군으로, 우리 조국을 인공지구위성 제작 및 발사국, 핵보유국으로 전변시키는데 특출한 공헌을 했다"고 평가함.



- **北 김정은, 로켓 발사훈련 지도…"말과 행동 다 준비돼야"(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 서부전선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에서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함.
 - 그는 전술로켓 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데 만족을 표시하고 "우리는 말과 행동이 다 준비돼 있어야 한다"며 "아무리 선량하고 정당해도 힘이 없으면 강자들의 흥정물이 되고 피로써 이어온 귀중한 역사도 한순간에 빛을 잃게 된다"고 강조함.
 - 김 제1위원장은 이어 로켓 부문의 '싸움준비'를 한층 강화하고 즉각적인 발사 태세를 유지해 "적들의 무분별한 대결광증을 강력한 군사적 역제력으로 제압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평양 순안국제공항 2청사 건설장 시찰(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2012년 7월 준공한 순안공항 1청사를 방문했을 때 2청사 건설을 지시했으며 현재 2청사 공사는 75% 마무리됐다고 통신은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2청사의 내외부를 둘러본 뒤 군인들이 건설을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고 "평양국제비행장 항공역은 평양의 관문, 우리나라의 얼굴"이라며 "항공역사를 건설하면서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나라의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민족성이 살아나게 마감해야 한다"며 시공에서 기술규정과 공법을 엄격히 지킬 것을 강조함.

- **北, '핵개발 주역' 전병호 애국열사릉 안치(7/1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지난 7일 사망한 전병호 전 노동당 군수 담당 비서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거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함.
 - 통신은 11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등 당정군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고, 영구차가 빈소인 평양 서장회관을 떠나 애국열사릉으로 이동하자 평양 주민들이 거리로 나와 애도했다고 전함.

■ 김정은 동향

- 7/7, 김정은 黨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웅도방어대 시찰(7.7, 중앙통신·중앙방송)
- 7/8,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8일 0시 김일성 사망 20주기를 맞아 인민군 지휘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7.8, 중앙통신·중앙방송)
- 7/8, 김일성 사망(7.8) 20주기 중앙추모대회(평양체육관 실황중계), 7월 8일 김정은 黨 제1비서 및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추모사)·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석한 가운데 개최(7.8, 중앙방송·중앙통신)



- 7/10, 김정은 黨 제1비서, 전략군 서부전선 타격부대들의 전술로켓 발사훈련을 현지지도(7.10, 중앙통신·중앙방송)
- 7/10, 김정은 黨 제1비서, 7월 9일 고 전병호 영구 조의 방문(7.10, 중앙통신·중앙방송)
- 7/11,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 국제비행장 항공역사 건설장 현지지도(7.11, 중앙통신·중앙방송)

■ 기타(대내 정치)

- 김형직(김정은 증조부) 생일 120주년 기념 중앙보고대회, 7월 9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7.9,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해외연고자 가족들을 위해 마련해 준 위로연', 7월 9일 진행(7.9, 중앙통신)
- 김일성의 '월남전' 당시 지원(공군 등 무력과 군복 수백만 벌) 등 '반제민족해방운동 강화발전 투쟁 지원 등 세계자주화 위업실현 업적' 칭송(7.11, 중앙통신)
- '상반년기간의 투쟁을 통하여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람이 세차게 휘몰아쳤다'며 '오늘의 양양된 기세를 늦추지 말고 비약의 박차, 총공세의 박차를 끊임없이 가하여 강성국가 건설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대고조진군을 힘차게 다그쳐 나가자'고 호소(7.12, 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사망(7.8) 20주기 관련 동향

- 노동계급과 직맹원들의 회고모임, 7월 7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7.7, 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우표발행국, 김일성 사망 20주기를 즈음하여 우표(소형전지 1종, 개별우표 1종) 새로 발행(7.7, 중앙통신)
- 김일성을 회고하는 외국선박선원들의 모임, 7월 7일 청진항에서 진행(7.7, 중앙통신)
- 주북 경제 및 무역참사단, 7월 7일 김일성종합대학을 참관(7.7, 중앙통신)
- 외국손님들과 해외동포들 러시아 정당과 일본 인사, 7월 7일 만수대언덕 김일성·김정일 동상에 꽃바구니 진정(7.7, 중앙통신)
- 시리아 대통령(바사르 알아사드), 7월 6일 김정은에게 전문을 전달(7.7, 중앙통신)
-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중앙추모대회, 7월 5일 일본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진행(7.7, 중앙방송)
- 재중조선인총연합회 회고음악회, 7월 3일 중국 길림시 송화강대극장에서 진행(7.7, 중앙통신)



나. 경제

● "북한 전세기 관광, 중국 노년층에 인기"(7/7, 동방망)

- 올여름 중국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 관광상품이 노년층 사이에 인기를 끌고 있다고 중국 동방망(東方網)이 7일 전함.
-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여행사들은 노년층 관광객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단체관광객의 북한 내 숙소를 중국의 4성급 호텔에 해당하는 특급호텔로 업그레이드한 고급 패키지도 출시했다고 신문은 전함.

●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애로"(7/7, 신화통신)

- 굴람 이시크자이 북한 내 유엔 상주조정관(UN Resident Coordinator)은 7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새 제재로 일반적인 은행거래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조달과 효율적인 배급 등 기능 수행에 많은 장애와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왔다"고 지적함.
- 이시크자이는 지난해 발생한 대홍수를 예로 들며 "홍수 발생 3개월 후에야 우리는 구호품을 구할 수 있었다"며 "이재민을 돕기엔 너무 늦었다"라고 말함.

● 中, WFP 대북 식량지원에 100만 달러 기부(7/8, 미국의소리(VOA))

- 중국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사업에 100만 달러(약 10억 원)를 기부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일 전함.
- WFP는 7일 VOA에 이같이 밝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북한 내 취약계층 180만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함.

● 월드비전, 개성서 북측과 '씨감자 사업' 논의(7/9, 조선신보)

- 대북지원 민간단체인 월드비전이 9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2010년 5·24조치'로 중단된 남북 공동 영농사업의 재개방안을 논의함.
-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장 등 4명은 이날 오전 북측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관계자들과 만나 평양, 양강도 대홍단군 등 5개 지역에서 진행 중인 씨감자 생산 사업에 대해 논의한 뒤 서울로 돌아옴.

● "北, 외국인에 평양 지하철역 모두 개방"(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0일 영국의 북한 전문여행사 '영파이오니아 투어스'를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처음으로 평양 지하철 2호선(혁신선)의 이용이 허용됐다"고 전함.
- 이 여행사는 다음 달 18일부터 26일까지 일정의 '지하철 관광'을 소개하며 "이번 여행에서는 외국인들이 1호선(천리마선) 모든 역을 둘러보고 다음날 2호선의 모든 역도 다 방문한다"고 밝힘.



- "UNDP, 올해 대북지원 예산 5%만 집행...송금 막힌 탓"(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개발계획(UNDP)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북한에 돈을 보내는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 대북 지원 예산의 5% 수준밖에 집행하지 못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올해 하반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예산 집행 비율이 4.6%에 불과한 것에 대해 UNDP 측은 "대북 지원사업 자금을 북한 조선무역은행에 보내야 하는데 대부분의 해외 금융기관들이 대북 제재로 조선무역은행과 거래를 중단하면서 북한 내부로 송금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RFA에 밝힘.

- 캐나다 단체 "北, 지원받은 콩우유 계획대로 분배"(7/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자선단체 '퍼스트스텝스'가 북한에 지원한 물품이 제대로 분배되고 있음을 '불시 모니터링'으로 확인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함.
 - 이 단체의 수잔 리치 대표 등 4명은 지난 6월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북한 평안남도과 강원도를 방문해 식량 등 지원품의 분배 상황을 점검하고, 앤 리 국장은 RFA와 통화에서 "원산, 남포, 형제산(평양)의 고아원을 방문했다"며 "이번에는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임의로 방문했는데 계획대로 콩우유 분배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함.

- "단둥-평양 국제열차 관광객 연간 1만명 규모"(7/10, 신화통신)
 -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국제열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 연간 1만명 규모로 성장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10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2001년 7월 양국 철도 당국이 이 노선의 관광업무를 정식으로 시작했을 당시 연간 수백 명에 그쳤던 관광객이 해마다 증가해 13년이 지난 현재는 연간 1만명에 달한다고 전함.

- "스위스, 대북 인도적 지원 2년 연장"(7/11, 미국의소리(VOA))
 - 스위스 정부가 대북지원 프로그램을 2016년 말까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1일 전함.
 - 대북지원사업을 담당하는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은 올해 말로 끝나는 '2012~2014 중기 지원 프로그램'을 2년 더 연장한다며 앞서 "스위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초 이사회가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밝힘.



■ 기타 (대내 경제)

- 김일성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큰모재배기술·광폭살균제 감자종자생산방법 등 많은 연구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선전(7.12, 중앙통신)
- 군인건설자들의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성과(먹이풀 씨뿌리기 150% 수행 및 수천 정보의 자연풀판 조성 등) 선전(7.13,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여전한 월드컵 열기...축구도서 '절판'(7/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북한의 체육신문사가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는 시기에 맞춰 출간한 '세계를 휩쓰는 축구 열풍'이란 제목의 축구도서의 인기가 매우 높아 출판 관계자들이 재판 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 도서가 주민들의 축구상식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며 특히 "축구반에 다니는 학생과 학부모, 축구학급 지도교원(감독)들 속에서 귀중한 자료로 되고 있다"고 밝힘.

● 北, 유엔에 '김정은 암살 영화' 항의 서한(7/9,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 미국 코미디 영화에 항의하는 서한을 유엔에 보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전함.
- VOA에 따르면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지난달 27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 제1위원장의 암살 작전을 그린 영화 '인터뷰'가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모독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권 국가의 수반을 암살하는 내용의 영화가 제작, 배급되도록 하는 것은 '적나라한 테러 지원이자 전쟁행위'라며 미국 정부가 이 영화의 제작, 배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英, 작년 대북 공적원조 7억원...절반은 영어교육"(7/9, 미국의소리(VOA))

-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대해 약 6억7천만 원 규모의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9일 보도함.
- 또한 영국 외교부는 2000년부터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영어 교육 사업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사업 시행 기간을 2017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VOA가 전함.

● '세계적 수준' 호텔리어 꿈꾸는 北 학생들(7/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이 호텔 관련 전문가 양성을 위해 지난 4월 개설한 봉사학교를 자세히 소개함.



- 조선신보는 "학교의 교육내용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개척한 학문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며 "교원들은 명실 공히 세계적 수준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함.

● **北, 방글라데시 의약품 수입 급증(7/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방글라데시에서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전함.
- RFA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의 무역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5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한 의약품은 6만4천달러(약 6천400만원) 어치로, 이로써 북한이 방글라데시의 2014년 회계연도(2013년7월~2014년6월)에 수입한 의약품은 14만6천 달러(약 1억4천800만원) 규모로 2013년 회계연도(6만8천 달러)의 두 배로 증가함.
- RFA는 또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무역통계 자료를 인용, 지난 5월 미국의 방사선 의료기기 16만3천 달러(약 1억6천500만 원) 어치가 북한에 들어갔다고 밝힘.

● **노동신문 "청년에 투자하자"...北도 청소년 인구 감소(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청년들에게 투자하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오늘 인구문제 해결에서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 미래를 대표하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준비시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유엔인구기금(UNFPA)이 올해 세계 인구의 날 주제를 '청년들에 대한 투자'(Investing in Young People)로 정한 데 주목하며 북한에서도 이에 맞춰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고 소개함.

■ 기타 (대내 사회 문화)

- 北 설경 선수, '2014 그랜드상 유도경기대회'(몽골 울란바토르) 여자 78kg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7.7,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노동당출판사, 김정일 저작들을 연대순에 따라 수록한 '김정일 전집' 제7권 출판(7.9,중앙통신)
- 국가과학원 경공업과학분원 창립 60주년 기념 과학기술성과 발표회, 7월 9일과 10일 평양에서 진행(7.10,중앙통신)
- 北, 7월 10일 '세계인구의 날'(7.11)을 즈음하여 평양에서 토론회 진행(7.10,중앙통신)
- 北 체육인들이 지난 20년간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에서 1,400여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였다고 선전(7.10,중앙통신)
- 황해남북도·남포시 등 전반적 지역에서 가뭄지속으로 농작물들이 말라죽는 등 "알곡생산에 엄청난 난관이 조성되고 있다"며 '가뭄극복 투쟁에 수단과 역량 총동원 전개' 보도(7.11,중앙통신)



2. 대외관계

가. 일반

- **북한 주재 중국대사, 시진핑 방한기간 북중경협 시찰(7/7, 연합뉴스)**
 -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대표적인 북중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해 양국 간 친산협력 강화를 역설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7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류 대사는 2일부터 4일까지 나선특별시에서 북중이 공동 개발관리하는 나선특구와 양국 국경통상구인 중국 취안허(圈河)-북한 원정리통상구, 선봉백학공업원구, 나진항, 선봉항, 웅상항 등지를 둘러봤다고 뉴스가 전함.
- **조선신보, 日 아베 정권 우경화 행보 비난(7/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가속화되어가는 일본의 군국화란 제목의 '시론'에서 아베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달성하려는 최종 목표는 "징병제의 부활"이라고 강조함.
 - 이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A급 전범 용의자였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의 손자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오늘의 동북아시아 평화상황을 대번에 전쟁상황으로 바꾸기 위해 등장한 자가 아베"라고 비난하며 "못 견디게 전쟁을 일으키고 싶은 현 일본정권이 현재 그려보는 전쟁터는 중국이 아니라 바로 조선"이라며 아베 정권이 "북조선 섬멸작전을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함.
- **"조선총련 의장, 김일성 20주기 방북 포기"(7/8, 산케이신문)**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은 지난 5월28일 이뤄진 북일 '스톡홀름 합의'로 조선총련 인사들의 북일 왕래 관련 제재가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달 총련 간부들에게 김일성 주석 20주기에 맞춰 방북하고 싶다는 희망을 피력했지만 정작 제재가 풀렸음에도 방북을 단념했다고 8일 산케이는 전함.
 - 산케이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상납할 자금이 생각만큼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방북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중국, 북한 접경지 첨단 감사신고 장비 확충(7/8, 인민망)**
 - 8일 인민망(人民網)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중국 국경수비대는 4월 북한과 국경을 맞댄 압록강변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주민에게 휴대전화형 신고장비 1천여 대를 무료로 나눠줌.
 - 현지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 **일본 정부, 北미사일 발사 외교루트 통해 항의(7/9, 교도통신)**

 - 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미국, 한국 등 관계국과 공조해 관련정보를 수집, 분석할 것 등을 관계 부처에 지시함.
 - 통신에 의하면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 항공기, 선박의 피해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극히 문제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 베이징 대사관 루트를 통해 북한에 항의함.

- **北 신문, 美 '지뢰금지 한반도 예외' 방침 비난(7/9, 조선중앙통신)**

 - 민주조선이 9일 논평에서 마리 하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달 27일 미국의 지뢰 생산구매 중단 방침이 한반도 방어 태세와는 무관하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미국의 대조선(대북) 적대시정책, 나아가서 침략적 대외정책에서는 조금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매설된 지뢰들은 미국의 침략적인 대조선 지배전략의 산물"이라며 "미국이 군사분계선 지역에 매설된 반보병 지뢰들을 계속 사용할 기도를 드러낸 것은 우리 공화국(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계속 추구하며 남조선을 영원히 타고 앉아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 실현에 적극 활용해나가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함.

- **"북한, 일본에 복수의 납치피해자 생존 통보"(7/10,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최근 일본에 제시한 북한내 일본인 생존자 명단에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보도함.
 - 북한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무성 국장 간 협의 때 북한에 살아 있는 일본인 약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가족구성 등이 적힌 명단을 일본 측에 제시했으며 이 명단 안에 복수의 공인된 일본인 납북자가 포함돼 있다고 닛케이는 전함.

- **北 "유엔 '北 미사일 제재' 결의는 국제법 위반"(7/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10일 미사일 발사체 사용을 금지한 유엔 결의는 보편적인 국제법을 무시한 '불법의 극치'라고 비난하며 미사일 발사는 자주권에 해당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사회과학원 법률연구소 리경철 실장은 "유엔 결의들이 조선반도에서 무용지물로 되게 하는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 훈련이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미국은 40여 년 전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 군대를 철거시키도록 한 유엔 결의를 어떻게 대했는가"라고 반문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이노키 등 日 국회의원 6명 평양 도착(7/10, 조선중앙통신; 교도통신)**

 - 안토니오 이노키 일본유신회 소속 참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이 10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교도통신은 이노키 의원 일행이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 등과의 회담하기 위해 조율 중이라며, 앞서 이노키 의원은 경유지인 중국 베이징에서 북일 관계에 관해 "여기서 후퇴하면 앞으로 10년간 교섭할 수 없게 되고 만다"며 "탁 터놓고 속내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함.
- **北, 미국 강력 비난... "패권적 지위 잃고 멸망할 것"(7/1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1일 '미국의 쇠퇴 몰락은 역사의 필연이다'라는 제목의 백서를 발표하고 "미국이 가련한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필연"이라며 이같이 밝힘.
 - 통신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중시전략은 '침략과 간섭의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의 이 전략은 지역 나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오늘날 전면 파산에 처했다"고 지적함.
- **조선신보 "北 미사일 발사 훈련은 전쟁 억제 목적"(7/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미국의 도발을 제압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월과 7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적으로 이뤄진 미사일 발사를 거론, "미국의 도발을 제압하는 자위적 억제력"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 훈련에 대해 전쟁 발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전함.
 - 또 "동북아시아에서 열강들의 갈등과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조선이 군사적 억제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특히 로켓 과학기술과 사격방법의 발전 완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보도함.
- **아베 "미사일 발사, 북일 합의에 영향 없어"(7/13, 교도통신)**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13일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합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무죄판결 北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 파나마서 출국"(7/13,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파나마에서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2명이 풀려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3일 전함.
 - 미국의소리는 이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홀리오 베리오스 변호사 측이 쿠바 주재 북한 외교관 2명이 지난 11일 파나마에서 선장과 선원들의 신병을 인도받아 다음 날 쿠바로 떠났다고 밝혔으며 선장과 선원들은 비행기로 쿠바에서 휴식을 취한 뒤 러시아 모스크바와 중국 베이징을 거쳐 평양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기타 (대외 일반)

- 리수용(외무상), 7월 10일 주북 브라질 대사(로베르트 콜린)와 담화 (7.10, 중앙통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사 백서(7.11)] 미국이 "전횡과 독단, 일방주의적인 정책"으로 '국제무대에서 패권적 지위 상실과 정치·군사 경제 등 총체적 위기'를 겪고 있으며 "미국이 쇠퇴몰락,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은 역사의 필연"이라고 주장(7.11, 중앙통신)
- [세계인구의 날(7.11)] 즈음 '北의 각종 활동(청년들에게 투자하자' 주제 토론회·'인구소식' 특간호 발간) 선전 및 '국제기구들과 협력 강화를 통해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강조(7.11, 중앙통신 노동신문 중앙방송)
- 강석주(黨 비서·조일우호친선협회 고문), 7월 11일 訪北 일본 국회의원 대표단(단장 : 이노키 간지 참의원) 면담 및 박근광(黨 부부장·조일우호친선협회 회장) 등 배석(7.11, 중앙통신·중앙방송)
- 미국의 세계 각국 도청 사건을 거론하며 '선진기술을 도용하여 세계를 거머쥐어 보려는 미국의 범죄적 정체를 폭로해 주고 있다'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들이 미국을 배척하는 움직임은 더욱 거세어 질 것'이라고 주장(7.13, 중앙방송)

3. 대남동향

가. 정치·군사

● 조선신보 "北 정부 성명은 북남관계 발전상 설계"(7/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에서 제시된 북남의 활로'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아시아경기대회에 북한 응원단이 파견되면 북남관계 개선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지만, 정부 성명은 눈앞의 현실 변화만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힘.
- 조선신보는 '겨레가 지지하고 민족의 공동번영을 담보하는 통일 방안을 지향해야 한다'는 성명의 구절을 인용해 "과거에 합의한 통일방안을 상기시킨 것은 '통일'을 한목소리로 주장해야 할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함.

● 北 "정부성명에 온 겨레가 화답해야"…南 호응 촉구(7/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변함없이 들고 나가야 할 조국통일의 근본원칙'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정부 성명을 거론하며 우리민족끼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통신은 "조국통일의 정당한 길은 오직 민족을 중시하고 민족의 힘에 철저히 의거하는 길, 우리민족끼리의 이념을 고수해나가는 길뿐"이라며 민족 문제에서 외부와 공조하는 것은 '사대매국행위'라고 비난함.



- **北, 스커드 추정 단거리 미사일 2발 또 동해로 발사(7/8,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의 관계자는 8일 "북한이 오늘 새벽 4시와 4시20분께 2회에 걸쳐 황해도 지역 일대에서 동북방향의 동해상으로 항행금지지역을 선포하지 않은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밝힘.
 - 뉴스에 의하면 이 관계자는 "이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되며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발사 가능성에 대비해 감시를 강화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北, 美 항공모함 부산 입항 비난..."용납 못 할 도발"(7/11,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1일 '책임은 전적으로 호전광들이 지게 될 것이다'는 제목의 글에서 온 민족과 국제사회가 최근 북한 국방위원회의 특별제안과 '공화국 정부 성명'을 지지하며 한반도 정세 완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고대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러면서 미국이 핵 항공모함을 끌어들여 남한, 일본과 위협한 연합훈련으로 대답했다며 "우리에 대한 용납 못 할 엄중한 도발이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내외 여론과 온 겨레에 대한 약탈한 도전"이라고 지적함.

- **北국방위"美항공모함 南입항이 남북관계 개선확망"(7/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국방위원회는 12일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이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꾀하는 도발이라며 남측에 '올바른 선택'을 하라고 경고했다고 12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국방위는 또 조지워싱턴호의 부산 입항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군사적 망동이자 "엄중한 사태"라며 남측에 "북과 남 사이에 여러가지 문제가 일정에 올라 있는 현 시점에서 똑바른 선택을 할 때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중앙통신은 보도함.

- **北, 개성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13일 새벽 개성 북쪽지역에서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13일 보도함.
 - 합참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새벽 1시20분과 1시30분께 등 2회에 걸쳐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다고 뉴스는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 파견"...'정부성명' 발표(7/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7일 '공화국 정부 성명'을 발표, "우리는 당면하여 북남관계를 개



선하고 민족단합의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 남조선의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우리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파견하기로 하였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성명은 "우리의 이번 성의있는 조치는 냉각된 북남관계를 민족적 화해의 열기로 녹이고 전체 조선민족의 통일의지를 내외에 과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통신이 전함.
- "인천 아시안게임 북한 응원단, 100명 수준 될 듯"(7/7, 연합뉴스)
 - 남북체육교류협회의 김경성 이사장은 7일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난 3월 중국에서 만난 북측 관계자들로부터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외모·사상을 기준으로 선발된 20대 초중반 여성들로 구성되며 규모는 100여명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전함.
 - 또한 "응원단 규모는 앞으로 남측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태도에 따라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지만 북측이 남측에 먼저 지원을 요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고 뉴스가 전함.
- 北 "AIIIB에 南 가입 논란, 美 지배체제 붕괴 신호"(7/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뒤흔들리는 지배체제'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미국이 한국에 AIIIB 참가를 보류하도록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를 거론하고 "남조선까지 은행 창설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것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미국의 동맹 내부를 더욱 유명무실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며 "세계 제패를 노린 미국의 하부구조들은 밀뿌리채 뒤흔들리고 있다"고 주장함.
- 北 "개성공단 출입질서 위반시 1~2일 통행금지" 통보(7/8, 연합뉴스)
 -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지난 6일 서해 군사실무책임자 명의로 "오는 10일부터 개성공단 출입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1~2일 정도 통행금지를 하는 등 강화된 제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우리측에 보내왔다고 연합뉴스가 8일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이에 대해 우리 측은 8일 "질서유지 문제 등 개성공단 현안은 일방적 조치가 아니고 남북간 협의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통일부가 전함.
- 北, 아시안게임 참가 관련 15일 실무회담 제의(7/1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문을 보냈다"며 통지문은 "우리 선수단의 경기대회 참가와 응원단의 파견에서 제기되는 제반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7월 15일경 판문점 우리 측 지역 또는 남측 지역에서 해당 관계자들의 북남실무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고 보도함.



- **北 "인천서 통일의 함성을"...응원단 파견 연일 선전(7/10,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필자가 장길성으로 된 '한 장의 사진을 보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남북이 나눈 뜨거운 동포애를 부각함.
 - 우리민족끼리는 10일 과거 응원단으로 남한을 방문한 여성이 썼다는 '적대와 대결의 찬바람을 밀어버리자'는 글도 실음.

- **北 "동족이 내민 화해의 손 잡아"…南 호응 촉구(7/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이날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열기 위한 확고한 의지'라는 논설에서 지난 7일 6·15공동선언 존중 등을 촉구한 정부 성명에 대해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진정과 성의가 얼마나 열렬한가 하는 것을 내외에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남북이 새로운 관점, 입장에서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나가자며 "우리가 이미 천명한 문제들이 실현된다면 악화된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는 데서 전환적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임.

- **北 TV, 韓美日 경기만 중계 안 해(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달 14일부터 한 달 동안 거의 매일 저녁 월드컵 주요 경기장면을 편집해 중계해왔지만 브라질 월드컵 종료를 하루 앞둔 13일까지도 한국과 미국, 일본팀의 경기장면은 단 한 차례도 중계하지 않았다고 전함.

- **정부, 나진-하산프로젝트 2차 실사단 방북 승인(7/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정부가 나진-하산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우리 기업과 정부 관계자 등 실사단의 2차 방북을 승인했다고 보도함.
 - 실사단은 컨소시엄 3사(코레알포스코현대상선)와 정부 관계자 등 모두 38명으로 이들은 러시아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방북해 나진-하산 철도 구간과 나진항 3부두 등 현장을 실사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기타 (대남)

- 北 정부 성명 발표(7.7) 관련 '남북사이의 대결상태의 해소는 남북관계 개선과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절박하게 나서는 현실적 문제'라며 '南당국은 동족대결 정책을 연북화해 정책으로 바꿀 대응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7.7,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美 국무성 대변인 對北발언(지뢰 생산·구매 중단 방침이 한반도 방어태세와는 무관하다) 관련 '남조선을 저들의 아시아태평양지배전략 실현의 교두보로 영원히 타고 앉으려는 음흉한 술책의 발로'라고 비난 및 주한미군 무력증강을 거론 '북침전쟁도발책동의 일환'이라며 조속한 철수 주장(7.9,중앙통신)
- 「반제민전」 중앙위 부위원장, 7월 8일 北 정부 성명 지지 담화 발표(7.9,중앙통신)

공화국 정부 성명이 이남 민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인정하면서 이를 지지 찬동하며, 반제민족민주전선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과 번영을 바라는 전국민과 함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투쟁을 힘차게 벌임으로써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새 지평을 열어놓고야 말 것임.

● 북한연구센터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美과학자협회장 "北경수로 완공하면 매년 5~6개 핵폭탄 제조"(7/7, 연합뉴스)**
 - 매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을 펴내는 찰스 퍼거슨 미국 과학자협회(FAS) 회장은 6일(현지시간), "북한이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를 완공하면 매년 30~40kg의 플루토늄을 생산해 5~6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 퍼거슨 회장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능력은 급속히 증강될 것이며 몇 년 안에 파키스탄이나 인도의 핵무기 개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북한 핵 문제를 더는 외면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라 지적했다.
 - 또한 "북한을 절대로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단순히 핵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안보문제를 비롯해 북한이 주장하는 모든 우려 사항을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다시 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北, '핵문제' 요지부동...비핵화대화 전망 불투명(7/7, 연합뉴스)**
 - 북한은 7일 소위 '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를 발신하면서도 "핵 무력은 평화와 안전을 위한 담보"라고 재확인하는 등 대화공세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비핵화 대화 재개 문제는 여전히 '오리무중'인 상황임.
 - 우리 정부가 최근 북한의 소위 '특별제안'을 일축한 것도 북한의 이런 태도와 맞물려 있는데, 북한의 이런 입장은 비핵화 대화가 필요하다는 한미 양국의 입장과의 상충되면서 북한과의 간극이 전혀 좁혀지지 않고 있음.
 - 하지만 표면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 변화가 감지되지 않더라도, 6자회담 재개 준비 차원에서 다양한 형식의 대화를 타진해볼 만한 분위기가 조성될 경우 관련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 **北, 개성 북쪽에서 단거리 미사일 2발 동해로 발사(7/13, 연합뉴스)**
 - 합동참모본부는 13일, "북한은 오늘 새벽에 2회에 걸쳐 동해 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으며 발사체의 사거리는 500여km 내외로 판단된다"고 밝혔는데 "군사분계선(MDL)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14번째로, 이번 발사는 지난 9일 황해도 평산에서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 추정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한 이후 나흘 만이며 이번 발사지점은 북한의 그동안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지점 중 가장 남쪽에서 이뤄진 것임.
- 군 관계자는 북한이 MDL부근에서 발사한 것과 관련,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과시한 것"이라며 "미 항공모함의 부산항 입항에 대한 반발과 자신들의 특별제안을 남측이 수용하라는 압박의 성격도 있다"고 분석했음.

나. 미·북 관계

- **美 "北 스커드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7/10, 연합뉴스)**
 -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시간),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이 스커드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으며 미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말했음.
 - 쟈 사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주도 안 되는 사이에 벌써 네 번째 미사일 발사"라고 지적하며 "이와 같은 도발행위는 일반적으로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으로 북한에 변영과 안보를 주지 못한다"고 비판했음.
 - 사키 대변인은 특히 "북한이 국제법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인근 상선과 어선, 승객과 화물기 등에 대해 명백히 사전통지하지 않은 것을 우려한다"며 "다시 한 번 북한이 도발적 행동을 자제하고 국제적 의무와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음.
- **美 국무부 차관보 "北-이란-시리아 무기수출 협력 주시"(7/12, 연합뉴스)**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2일, 토머스 컨트리맨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가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간 대량살상무기 협력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대량살상 무기기술 확산과 재래식 무기수출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보도했음.
 - 또한 "미국은 북한의 무기 확산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큰 성공을 거뒀지만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고 말했는데 어떠한 관련 움직임을 포착해 저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고 VOA가 전했다.
 - 컨트리맨 차관보는 최근 잇따른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라 지적하고 북한의 핵실험 예고가 종종 행동으로 연결되는 만큼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 중북 관계

● 북한 주재 중국대사, 시진핑 방한기간 중북 경협 시찰(7/7, 연합뉴스)

- 7일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한국 방문 기간 류홍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대표적인 중북 경제협력 프로젝트인 나선경제특구를 방문해 양국 간 친선협력 강화를 역설해 눈길을 끌고 있음.
- 류 대사는 "올해는 중북 수교 65주년으로, 이번 시찰의 주목적은 중북이 공동 개발관리하는 나선특구의 진전 상황 및 나선사함경북도와 중국과의 경제무역 협력 상황을 파악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음.
- 나선특구는 지난해 초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중국 측 투자가 지지부진해 개발이 답보 상태에 있었으나 지난달 27일 중국에서 나선특구로 가는 새 교량의 공동 건설 및 관리 협정 체결과 최근 중국 당국의 움직임이 특구 개발의 활기를 불러일으킬지 주목됨.

● 中 대북 원유수출 실적 '0'에도 北 변화감지 안돼(7/8, 연합뉴스)

- 올들어 중국의 대북 원유 수출이 사상 첫 5개월 연속 '제로(0)'를 기록했지만,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북한 내 휘발유 값은 1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재까지 연료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해 북한 내 유류 사정에 급격한 변화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음.
- 전문가들은 중국 세관 당국이 매월 공식 집계하는 중북 무역통계에 올해 1~5월 대북 원유 수출 실적은 없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 무상원조 등을 통해 중국이 북한에 원유를 공급하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음.
- 실제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유를 공급받는 주요 루트의 공장에서는 여전히 일부 설비가 가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 대북소식통은 "중국 당국이 송유관이 막히지 않을 정도의 원유를 보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 중국, 북한 접경지 첨단 감사신고 장비 확충(7/8, 연합뉴스)

- 8일 인민망(人民網) 등에 따르면 중국 국경수비대는 지난 4월에 압록강 변의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시 주민에게 휴대전화형 신고장비 1천여대를 무료로 나눠주는 등 접경지역의 치안 강화를 위한 첨단 감사신고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음.
- 중국 국경수비대는 2012년 말 개발된 이 장비를 북한인들의 주요 탈북 경로로 꼽히는 지린성 창바이(長白)현과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등 접경 지역 주민에게 지난해 각각 3천대와 600대를 보급한 바 있음.
- 한편 현지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해 국경지역 감시 강화 및 처벌이 강화되었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서 중북 국경을 통한 탈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일북 협상의 마지막 단계에 내 놓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내 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매우 뜻밖의 일"이라고 말했다.

마. 기타

- **대북 제재로 인도주의적 지원에 애로<유엔 관계자>(7/7, 연합뉴스)**
 - 굴람 이시크자이 북한 내 유엔 상주조정관은 7일, "2013년 이후 이뤄진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로 인해 일반적인 은행거래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내 조달과 효율적인 배급 등 인도주의적 지원 프로그램에 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에 따르면 북한은 상반기에 1천960만 달러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받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감소한 수치이며 이시크자이는 한반도 정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로 인해 자금 모금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만성적인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에 대한 구조적인 원인을 찾으려면 유엔은 자금이나 조연 등의 제공을 넘어 전략적 이슈에 더 개입하거나 장기적인 투자와 개발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백악관 한반도 보좌관 "한국, 中 주도 AIB 가입 신중해야"(7/8, 연합뉴스)**
 - 시드니 사일러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담당 보좌관은 7일 (현지시간), "현시점에서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이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 수준의 기준들을 이행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며 한국의 가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일러 보좌관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지배구조와 환경사회적 세이프가드, 조달 측면에서 높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또한 AIIB가 다자적 개발기관과 협력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미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가 우리나라의 AIIB 가입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신중론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주 시진핑 국가주석의 방한을 계기로 한국의 AIIB 가입을 공식 제의했고 우리 정부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놓은 상태임.



나. 한중 관계

● 한중관계가 중북관계보다 이득…中매체 이색비교(7/8, 연합뉴스)

- 중국의 주요 온라인 뉴스사이트인 왕이(網易)는 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으로 한중, 중북 간 역학관계에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한중관계의 정상적 발전은 중북관계에 비해 더욱 이득"이라고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음.
- 그는 유엔의 상품무역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인용, 한중 및 중북 간 무역 비중의 추이(1995~2012년)를 비교한 뒤 "무역량과 왕래 인원을 보면 한중관계가 중북관계를 초월한다는 것은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며 이는 시장경제 발전의 필연적 결과"라 주장했음.
- 이 매체의 이번 기사는 한중, 중북관계 상황을 오직 '무역'을 기준으로 단순 비교한 것이기는 하지만 시 주석 방한을 계기로 중국 내에서 점차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중북, 한중관계를 냉정하게 보자는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음.

다. 한일 관계

● 윤병세 "日 방위안보태세 강화, 한국 내 큰 우려 존재"(7/9,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매컬리 뉴질랜드 외교장관은 9일 서울에서 회담을 하고 일본의 방위안보 태세 강화에 큰 우려가 있다면서 일본의 관련 정책 변화는 지역의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주변국의 의구심과 우려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함을 강조했다.
- 윤 장관은 또한 북한이 최근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등 유화적 제스처와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긴장 고조를 병행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에 우리 정부는 원칙 있는 대응 기조를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에 매컬리 장관은 존 키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 7일 아베 일본 총리와 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 변화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신뢰 형성의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전했으며 더불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 정부 "유사시 한미연합작전구역서 日집단지위권 불용"(7/9, 연합뉴스)

- 정부의 한 고위 소식통은 9일,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사령관이 설정하는 연합작전구역(KTO: Korea Theater of Operation) 내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우리 정부의 요청이 없는 한 용인될 수 없다"고 밝혔다.
- 이러한 정부의 입장은 기존 입장보다 더욱 구체적인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유사시 연합사령관이 전작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이 동맹국인 일본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국내 일각의 우려가 계속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다른 소식통은 "KTO에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서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해 이와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미국과 일본 측에 통보했음을 시사했음.

라. 마중 관계

- "AIIB는 美 주도 금융질서 도전"...워싱턴 강경기류(7/8, 연합뉴스)
 -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대한 워싱턴의 기류는 의외로 강경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이는 아시아,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입김'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팽배한 데 따른 것임.
 - 특히 미국 정부 내에서 AIIB의 설립 의도를 의심하는 가장 명확한 이유는 일본을 명시적으로, 미국을 묵시적으로 AIIB에서 배제한다는 점으로, 지난 5월 15개 아시아 국가 대표단을 초청해 AIIB 설립 취지를 설명했지만 미국과 일본은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음.
 - 중국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의식한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리우 재정부장은 지난 4일 "AIIB가 창설되면 세계은행이나 ADB와 협력할 것"이라며 "사회기반시설 조성의 재정 지원을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 中, 전세계 통신망 감시조직 운영(WSJ)(7/9, 연합뉴스)
 -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 '중국이 전세계를 몰래 감시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3PLA(중국 인민해방군 제3총참모부)'라 불리는 중국의 정보기관 실태를 소개하며 중국이 비밀리에 전세계 통신망을 감시하는 '중국판 NSA'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도했음.
 - 3PLA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앙군사위원회(CMC)의 통제를 받는 중국군 핵심 조직으로 파악되며, NSA가 매년 백악관이 운용 목표를 설정하는 반면 3PLA는 CMC가 5년 주기로 계획을 세우므로 상대적으로 재량권이 많다고 설명했다.
 - WSJ는 올해 들어 정보화를 주요 전략적 사안이라고 강조한 시 주석이 3PLA의 효율성 극대화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한편 중국 당국은 그동안 3PLA의 존재를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사이버 감시 활동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 G2의 파워 게임...마중 전략경제대화 폐막(7/10, 연합뉴스)
 - 중국 베이징에서 9~10일 이틀간 진행된 제6차 마중 전략경제대화(S&ED)에서 양국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며 'G2'의 경쟁과 협력의 현 주소를 그대로 보여줬으며 '핵심 이익'에서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면서도 협력의 공간을 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음.
 - 양국이 가장 민감하게 대립한 부분은 영토주권과 인권문제인데, 특히 중국은 영토문제에 관한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을 강



조했으며 미국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행보를 '낮은 수준의 침공'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하지만 북핵문제와 상호 투자협정(BIT), 군사교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양국이 한 발짝 다가섰다고 평가되고 있는데, 케리 장관은 "양국이 비핵화되고 안정적이며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드는 중요한 긴급성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美, 남중국해서 中 견제 새 전술 개발(FT)(7/10, 연합뉴스)

-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일, 미 국방부가 남중국해 분쟁 지역에서 중국의 느리지만 꾸준한 영토 확장을 저지하기 위해 '한층 공격적인(more aggressive)' 정찰기 사용과 해군 작전을 포함한 새로운 군사전술을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 미국이 당면 과제는 군사적 충돌로 확대될 수 있는 특별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의 세력 확장을 막을 수 있는 전술을 찾는 것으로,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저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그동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하지만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서 아시아 전문가는 "미군 정찰기는 미국이 평화적 분쟁 해결에 관심이 있으며 중국의 강압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도 "이런 전술이 중국의 행동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라고 지적했음.

마. 마일 관계

● 美전문가 "日집단지위권 결정은 민주절차 위배" 비판(7/7, 연합뉴스)

- 미국 워싱턴의 비영리 연구단체인 아시아 폴리시 포인트(APP)의 민디 코틀러 소장은 6일(현지시간), "아베 정권의 집단지위권 행사 결정은 실질적으로 평화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각의 결정만으로 헌법을 바꾼 것은 민주주의 절차의 위배"라고 비판했음.
- 코틀러 소장은 "일본 정부는 헌법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자신들이 원하면 헌법상의 어떤 문구라도 법률적 절차나 사법적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고 이에 따라 헌법의 권위가 무력화됐다"고 비판했음.
- 또한 "미국은 일본이 이제는 민주주의의 모델이 되지 못한다는데 경악해야 한다"며 "무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이 가진 최대의 무기는 법치주의였는데, 일본이 더는 선망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꼬집었음.

● 日, 한반도 유사시 대응 담은 마일 협력법 검토(7/8, 연합뉴스)

- 일본의 마이니치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한반도 유사시 등에 대응하는 방안을 포함한 포괄적인 '마일 협력 신법(新法)'의 제정을 검토할 것이



며 이르면 연내에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음.

- 1997년 개정된 현행안은 평시, 주변사태, 일본 유사시 등의 상황에 대한 마일 군사 협력의 기본 방침을 담고 있지만 주변사태법 등은 특정 사안이 발발해 한반도 유사시 등 '주변사태'로 인정되는 시점까지의 마일 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담고 있지 않음.
- 신문은 또한 지난 1일 집단 자위권 등과 관련한 각의 결정에 자위대의 지원 활동과 관련한 제약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소개하고, 이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주변사태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 일본 재처리시설 가동땀 핵폭탄 2천개 제조능력(7/11, 연합뉴스)

- 미국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의 헨리 소콜스키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원자력협정 공청회에 출석해 일본 정부가 아오모리 현에 건설 중인 핵재처리 공장이 정식 가동되면 매년 2천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그는 또 "중국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미지수이지만 일본과 한국의 안보는 물론이고 미국의 지역안보에 도전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의 원자력협정을 재협상해 일본이 원자력 계획을 공개적으로 재검토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문했음.
- 현재 한국과 중국 등은 일본이 재처리 공장가동을 계기로 본격적인 핵무장화의 길로 접어들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으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오는 10월 이 공장을 완공한 뒤 가동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 마일 국방장관 회담...헤이글 "집단지위권 결정 환영"(7/12, 연합뉴스)

- 척 헤이글 미 국방장관은 1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오노데라 일본 방위상과 국방장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대담하고 역사적이며 획기적인 일본 내각의 이번 결정은 일본이 지역 및 글로벌 안보와 국제무대에서의 역할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 말했음.
- 또한 "아울러 이번 결정은 마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역사적인 개정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일본이 미사일 방어, 해적 소탕, 평화유지활동 등에 더 적극 참여할 수 있게 연말까지 새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부연했음.
- 오노데라 방위상은 최근 진행된 알북 협상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대해 헤이글 장관은 "파트너 국가들에게 투명성 있는 설명 접근법을 채택한 일본에 박수를 보낸다"고 덧붙였다.



바. 마러 관계

- **브레진스키 "푸틴, 무력 포기하고 우크라이나와 타협해야"(7/9, 연합뉴스)**
 - 브레진스키 전 백악관 국가안보담당 보좌관은 8일(현지시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크림 반도를 병합한 뒤 의기양양하게 애국주의적 연설을 한 지 3개월이 지났으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국제적 비용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그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분리주의자들에 대한 비밀 지원을 계속하면 서방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연장될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둘 다 경제적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음.
 - 또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서방의 즉각적 보복과 우크라이나의 격렬한 저항을 낳아 결국 러시아가 정치경제적으로 고립될 것"이라 전망했으며 따라서 결국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타협'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임.

사. 중일 관계

- **시진핑 "침략역사 왜곡미화 결코 허용치 않을 것"(7/7, 연합뉴스)**
 - 시진핑 국가주석은 중국의 항일전쟁 돌입의 계기가 된 '7·7사변' 77주년을 맞은 7일, "여전히 몇몇 사람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며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며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에 다시 한번 강력한 경고를 보냈음.
 - 시 주석은 이어 "(그들은) 국제적 상호 신뢰를 파괴하면서 지역긴장을 조성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누구든 침략 역사를 부정, 왜곡하고 심지어 미화하려 하다면 중국 인민과 각국 인민은 결코 이를 허용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음.
 - 중국의 '7·7사변' 기념식에 당정 지도자들이 참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최근 과거사와 동중국해 영유권 갈등 등을 놓고 치열하게 대립하는 일본을 압박하고 대내적으로는 '위기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 **中, 시진핑 강연 日 비판에 '역사공부하라' 반박(7/8, 연합뉴스)**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시 주석의 강연에 대한 일본 반응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일본 집권자가 침략 역사를 직시하지 못하는 현실을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며 "과거사 '보충수업'이 필요하다"고 비난했음.
 - 그는 "중국을 대상으로 잔혹한 침략전쟁을 일으켜 중국인민에게 깊은 고난을 준 점",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는 것은 이웃국가들과의 관계개선에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시 주석의 강연에 대해 "중국이 공공연히 역사 문제 등을 국제



문제화 하려는 것은 이 지역의 평화와 협력을 구축하는 데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중사회과학원 전문가 "중일관계 악화는 복합적 원인"(7/12, 연합뉴스)**

- 중국청년보(中國青年報)는 12일, 중국 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리웨이(李薇) 소장이 현재의 중일관계 악화 원인에 대해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은 중일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했음.
- 그는 "1972년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간 누적돼 온 문제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것"이라며 "일본은 역사를 바로 보고 우호관계를 이어가자는 국교정상화의 목표에서 벗어나 2006년부터 호혜가 목적이고 우호는 호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여기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또한 "현재는 과거사 문제에 영유권 분쟁이 더해져 공명(共鳴)하는 양상이며 안보와 군사 문제 역시 새로운 쟁점이 됐다"고 지적, "중국과 일본은 전략대화를 통해 각자 필요로 하는 상호관계를 상대국에 알려주고 평화발전에 대한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 중러 관계

● **러시아-중국 군사동맹 체결하지 않을 것<크렘린>(7/10, 연합뉴스)**

- 이타르타스통신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이바노프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장은 10일(현지시간), 중러 양국은 군사 분야를 포함한 여러 방면에서 빠른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군사동맹을 창설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 그는 또한 "서방의 다자군사동맹체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 등의 내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켰다"며 군사동맹체의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했음.
- 이어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 결제를 달러나 유로화 등의 경화가 아닌 루블화나 위안화 등의 양국 통화로 전환하는 계획과 관련해 양국의 합의와 두 나라 정상의 지시가 있었지만 단기간에 전환을 이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자. 일러 관계

● **러,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결정에 '신중 행보' 요구(7/8, 연합뉴스)**

- 러시아 외무부는 7일(현지시간),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일본의 새로운 헌법 해석 채택에 대해 "일본의 이번 선택과 관련해 성급한 평가를 내리고 싶지는 않으며 모든 것은 향후 일본 정부의 실제적 행보에



달렸다"고 지적했음.

- 그러면서 "일본 아베 내각이 2013년 12월 공표한 '적극적 평화주의' 틀 내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을 포함하여 일련의 행동들을 주의 깊게 지켜 볼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신중한 정책을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음.
-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를 인정하고, 군국주의 범죄를 사면하려는 시도를 용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하며 군사대국화에 대한 주변 국가의 우려를 일본 정부가 충분히 인식하고 대외 및 군사정책에서 신중한 행보를 취해야 한다는 주문을 했음.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외국 방문자들 "북, 화장실 혁명부터"(7/7,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사회주의 문명국을 건설하자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지방에는 화장실이 너무 낙후해 외국인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음.
 - 얼마 전 황해도 지방의 고아시설을 방문했던 미국의 한 지원단체 관계자는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들어갔던 외국인들이 상당히 난감했다"면서 "특히 서방 여성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경험이었다"고 밝힘.
 - 북한이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꾸려놓은 특수시설에도 화장실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임.
 - 관계자는 평양에 체류하는 동안 호텔방에서 수세식 변기, 즉 불일 본 다음 물로 씻어 내리는 변기를 써서 불편이 없었다면서 지방에 나가있을 때마다 화장실 때문에 애먹고 있다고 말했음.
 - 지난해 황해북도 사리원시에 있는 애육원 시설을 방문했던 60대의 한 재미교포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면서 당시 북한 주민들은 공동화장실 바로 아래에 시금치와 상추 등 야채를 심어 먹고 있는데, 그래서 각종 질병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음.
 - 북한은 평양의 고급 아파트나 호텔 등 특권시설에는 수세식 변기를 설치해놓고 있지만, 아직 수도의 웬만한 주택가에도 재래식 공동 화장실이 많음.
 - 북한에서 화장실 문화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탈북자들은 북한 당국이 매년 과도하게 벌이는 퇴비생산 때문이라고 지적됨.

- **북, '몰래 컴퓨터' 엄벌 경고(7/8,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산 중고 컴퓨터들이 장미당에서 헐값에 팔리면서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컴퓨터 사용을 방치하지 않고 컴퓨터 등록 및 관리규정을 강화했다고 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 당국이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는 '몰래 컴' 소유자를 "소형 라디오와 똑 같이 취급한다"고 선포해, 적발될 경우 간첩으로 몰릴 수 있다고 함.
 - 북한 당국은 녹음기와 녹화기, 디지털 카메라, 컴퓨터와 같은 미디어 전자제품들을 반드시 국가에 등록하고 정기적인 검열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 지난해부터 강화된 불법영상물 단속이 오히려 '몰래 컴'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됐는데 장미당들에 나가면 밀수꾼들이 들여 온 중국산 중고 노트북을 최저 중국 인민폐 600원(한화 12만원)으로도 살 수 있는 상황임.



- 등록되지 않은 노트북이 늘면서 북한 당국은 장미당에서 암암리에 팔리고 있는 '노트컴'을 단속하는 한편 인민반 회의를 열어 "몰래 컴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솔직하게 국가에 등록하라"고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음.
- 또 인민반 회의를 통해 비밀번호를 넣어 당국의 검열을 어렵게 하는 컴퓨터는 임의로 회수 조치될 수 있음을 경고함.
- 그러나 소식통들은 "당국이 아무리 단속을 한다고 엄포를 놓아도 '몰래 컴'을 근절시키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북, 용천지역 홍역 신의주까지 확산(7/8, 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6월 중순경 북한의 용천 지역에서 발생한 홍역이 관계당국의 통행 금지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의주지역까지 확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 신의주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용천과 신의주는 외부사람의 왕래가 일체 금지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용천에 이어 신의주 지역에도 지난 주말 홍역이 발생해 급속히 번지고 있다"면서 "어제(7/7) 현재 70대 노인 한 명과 어린이 2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 소식통은 홍역 발생 이후 용천, 신의주 지역 통제 기간을 7월 15일에서 2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통제 기간의 재연장 가능성도 시사했음.
- 평양에서 신의주 지역을 거쳐가는 열차는 중국을 오가는 국제 열차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이 열차도 신의주 역에서 정차는 하지만 승객들의 승하차를 일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 보건 당국이 용천에서 발생한 홍역이 인근 신의주 지역에 번지지 않도록 일찍부터 주민들의 왕래를 철저히 통제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의주 지역에 홍역이 전염되어 방역에 실패한 상황으로 보여지고 있음.

● 북, 상반기 식량부족분의 7%만 확보(7/8, 자유아시아방송)

-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 5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2014년 2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지원이 필요한 33개 식량부족 국가에 다시 포함했음.
- 올해 상반기 북한이 수입하거나 국제지원으로 확보한 곡물은 약 2만 5천 톤으로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필요량인 34만 톤의 7.4%만 확보하는데 그쳤으며, 2만 5천 톤은 수입 1만 3천 톤과 국제사회 지원 1만 2천 200여 톤으로 이루어짐.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의 2013년 곡물 수확량이 3년째 5% 이상 증가했지만, 만성적인 식량부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북한 가정 84%가 식량 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음.
- 또한 북한의 식량체계가 여전히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하고 단백질이 풍부한 작물 재배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특히 2살 미만 어린이의 발육부진율이 여전히 높고 미량영양소 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혔음.
- 식량농업기구의 보고서는 북한이 만성적인 식량부족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주요 이유로 경제가 나쁘고 농기계와 비료 등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음.



● **FAO, 북한 가뭄으로 이모작 작황 피해...가을 추수까지 악영향(7/10, 미국의 소리)**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9일 발표한 '국가보고서(Country Brief): 북한편'에 따르면 올해 초 봄 가뭄으로 밀과 감자 등 이모작 수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며, 옥수수 등 가을 추수 전망도 밝지 않음.
- 밀 수확량이 7만4천500t 정도에 이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 5년 간 평균 수확량에 비해 30% 정도 감소한 수치임.
- 보고서에 따르면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북한 내 최대 곡창지대인 평안남북도와 황해남도, 그리고 평양 일대의 농경지가 가장 컸으며, 밀과 보리, 감자 등 조기재배 작물들이 파종 시기인 3, 4월에 비가 많이 내리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음.
- 보고서는 6~7월 사이 거뒀다는 감자도 물 부족으로 인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했음.
- 식량농업기구도 북한 봄 가뭄으로 이모작 작물뿐 아니라 쌀과 옥수수 등 가을 수확 작물도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쌀농사의 모내기과 옥수수 파종이 통상 4월에 시작돼 6월 중순까지 진행되는데 4월에 비가 적게 내려 모내기 시기가 늦어졌다는 것임.
- 식량농업기구가 추정해 올해 식량 부족분 34만에 이모작 수확 감소량을 합하면 그만큼 식량 부족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식량농업기구는 북한이 공공배급체계 (PDS)를 통한 식량배급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곡물 수입을 늘리거나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음.

● **북, 방글라데시서 의약품 집중 수입(7/10,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올해 들어 방글라데시와 미국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십만 달러 어치를 잇달아 들여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최근 들어 병원 등 의료시설 방문을 통해 '주민사랑'을 과시하고 있는 점과 맞물린 조치로 풀이되고 있음.
- 북한이 올해(5월 기준) 방글라데시로부터 6만4천 달러 어치의 의약품을 들여간 것으로 나타났음.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의 무역통계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의약품 수입량은 지난해 하반기(2013.7~2013.12)에 8만2천 달러(\$82,644)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
- 북한이 2014 회계연도 (2013.7~2014.6) 11개월 동안 방글라데시에서 수입해간 의약품 규모만 14만6천 달러(\$146,814)에 이르며,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68,838)에 비해 두 배로 늘어난 수치임.
- 앞서 북한은 미국 상무부가 지난 3일 공개한 5월 무역 통계자료에서도 의료용 엑스선 장치를 포함한 방사선 의료기기 16만3천 달러 어치를 들여간 것으로 나타났음.
- 북한이 최근들어 이처럼 해외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집중 수입하고 있는 게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주민사랑' 과시와 연관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북 여성 경영인 130명 '선진 경영' 연수(7/10, 자유아시아방송)
 - 싱가포르 비정부기구 조선 익스체인지지는 지난 9일 2012년부터 진행해 온 'Women in Business Program', 즉 '여성 경영 프로그램'을 통해 북한에서 경영과 법 분야의 여성 전문가 130명을 대상으로 평양과 해외 지역에서 연수를 제공했다고 밝혔음.
 - 이 기구는 이날 '북한의 여성'이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7개도, 40개 기관에서 온 여성들이 경영 연수에 참가했다고 덧붙였다.
 - 전체 여성 참가자 중 해외 프로그램을 위해 선발된 여성은 15-20% 정도를 차지한다고 알려졌음.
 - 조선 익스체인지지는 또 북한에서 중소기업들을 이끌고 있는 여성 전문인력들이 북한의 경제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북한 여성들로부터 연수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아 앞으로도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북한과 해외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함.

2. 북한인권

- 슬로바키아 외무부 "북한에 사회·경제 변혁 과정 전수 의향"(7/8, 미국의 소리)
 - 보리스 간델 슬로바키아 외무부 대변인은 7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북한 당국이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함.
 - 간델 대변인은 이어 슬로바키아가 과거 경험을 토대로 최선의 사회·경제 변혁 실천 방안을 북한에 전수하고 싶다고 말했음.
 - 무엇보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을 최우선 의제로 삼아 긴장을 낮추고, 정치적 대화와 협상 등을 통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강조함.
 - 간델 대변인은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북자 조사 협력에 진전을 이룬 걸 환영한다는 슬로바키아 정부의 공식 입장도 전하면서 북한의 문제 해결 노력을 촉구했음.
- 국무부 "북 당국이 인신매매 가담"(7/8, 자유아시아방송)
 - 미국 국무부의 루이스 시드바카 인신매매퇴치담당 대사는 8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를 근절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이 인신매매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국의 직접 가담을 비난했음.
 - 북한 당국은 인신매매범 처벌이나 인신매매 피해자의 보호, 또 인신매매 방지와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는 것임.
 - 게다가 국내에 강제 노동수용소를 운영하고 외국과 계약을 통해 강제 노동 근로자들을 제공하면서 직접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다고 지적함.



- 시드바카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은 중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북송된 인신매매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전혀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 **정창호 ECCC 재판관 "北인권, 국제재판 회부 준비해야"(7/8, 뉴스1)**
 - 정창호(47) 크메르루주 유엔특별재판소(ECCC) 유엔재판관은 8일 열린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의 오후 세션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적하며 "국제재판 회부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정 재판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북한 인권침해 보고서는 '국가 최고위급에 의해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결의가 필요하고 유엔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해 북한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두 가지 방법 모두 쉽지 않다"면서도 "북한 상황을 주시하면서 국제재판 회부를 위한 상황별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 **스웨덴 '북한 김정은 체제, 인권 탄압 여전'(7/9, 미국의 소리)**
 - 스웨덴 외무부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북한이 여전히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여전히 매우 억압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 카타리나 악셀손 스웨덴 외무부 대변인은 8일 'VOA'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최종 보고서 내용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말했다.
 - 악셀손 대변인은 북한과 일본이 최근 일본인 납북자 조사 협력에 진전을 이룬 건 고무적이라고 말하며 일본이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유엔 안보리 결의에 합치되게 유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 **박대통령 "국제사법계, 北주민 인권에 관심 가져달라"(7/9, 연합뉴스)**
 - 박근혜 대통령은 9일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 등 대법원이 개최한 '2014 국제법률심포지엄'에 참석한 국내외 주요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 박 대통령은 오찬 발언에서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요청하며 "북한 주민들이 인권을 유린당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제사법계에서 기여해주시면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호주-일본, 북한에 비핵화인권 개선 촉구(7/10, 미국의 소리)**
 - 토니 애벗 호주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8일 호주 캔버라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활동을 지지한다면서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표명했다.
 - 또한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납북자 문제를 포함한 미해결 인도주의 사안이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경 지역 주민에게 지난해 각각 3천대와 600대를 보급했음.

- 현지 소식통들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지역 감시와 처벌이 강화되고 북한 내 식량 사정이 나아지면서 북중 국경을 통한 탈북이 다소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음.

● "신변보호 경찰 때문에 탈북사실 노출...인권침해"(7/13, 연합뉴스)

- 탈북자의 신변보호 임무를 맡은 경찰관이 부주의로 탈북자의 신분이 주위에 알려지게 했다면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옴.
- 인권위는 13일 탈북자 A(여)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A씨의 신변보호 담당 경찰관 B씨에 대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와 관련한 직무교육을 시행하라고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음.
- 인권위에 따르면 2005년 입국한 탈북자 A(여)씨는 작년 자신이 일하는 식당이 입주한 건물로 이사했는데, 2012년부터 A씨의 신변보호 담당관으로 일하던 B씨는 A씨가 이사한 지 20여 일이 지난 후 휴대전화로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를 하지 못했음.
- B씨는 A씨의 전입 주소로 등록된 건물을 찾아가봤지만 그가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지 못하자 A씨에게 "OO빌딩으로 전입한 후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아 거주 불명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전화연락 바랍니다"라고 문자를 보냈음.
- 이에 A는 전화를 걸어 "일하는 식당이 있는 건물에 살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항의했고, B씨는 연락이 닿지 않고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 같은 날 B씨는 A씨의 주소로 나온 건물의 관리소장에게 전화를 걸어 건물 내 여자 탈북자가 있는지 물었으며, 관리소장이 A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가서 "여기 탈북자가 있다는데 누구냐"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동료직원들에게 공개되었음.
- 인권위는 "탈북자라는 정보는 유출되면 취업활동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민감한 사적 정보"라며 "B씨가 탈북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을 위반,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음.
- 인권위는 "B씨는 A씨의 주소에 직접 가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제3자에게 확인을 요청,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A씨가 탈북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도록 했다"고 지적함.
- 인권위는 다만 B씨가 자신을 지나치게 감시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탈북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조치로,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음.



4. 이산가족

- 특이 동향 없음.

5. 납북자

- **일본 외무상 "납치조사, 구체적 성과 쌓고 싶다"(7/7, 연합뉴스)**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고베(神戸) 시 강연에서 7일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관해 "일본 측이 조사(내용)를 확인하겠다. 제대로 확인하고 대응하겠다"며 "구체적인 성과를 하나하나 쌓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 **"북한, 일본에 복수의 납치피해자 생존 통보"〈닛케이〉(7/10,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일본에 제시한 북한 내 일본인 생존자 명단에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치 피해자가 포함돼 있다고 니혼게이지(닛케이)가 10일 보도했으나, 일본 정부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음.
 - 닛케이는 북한이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외무성 국장 간 협의 때 북한에 살아 있는 일본인 약 30명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가족구성 등이 적힌 명단을 일본 측에 제시했으며, 이 명단 안에 복수의 공인된 일본인 납북자가 포함돼 있다고 전함.
 - 북측이 올 초 작성했다고 설명한 이 명단에는 납치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일본 정부가 보는 이른바 '특정실종자' 이름도 포함됐다고 닛케이는 부연했음.
 - 일본 정부가 이 정보를 입수하고 나서 9일까지 공인 납치 피해자와 및 특정실종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약 3분의 2가 일본 측 기록과 일치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그런 사실은 전혀 없다"며 "완전한 오보"라고 말함.
- **아베 "납북자 재조사 신중히 지켜봐야"(7/1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1일 북한의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에 관해 "특별 조사위원회에 의한 조사 진척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가 "북한이 성의를 지니고 (조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 아베 총리는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가을이 시작할 무렵에 북한으로부터 최초의 보고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 아베 "미사일 발사, 북일 합의에 영향 없어"(7/1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이 13일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일본인 납치문제를 둘러싼 북일 합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미사일 발사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납치문제의 확실한 해결을 위해 나서겠다"며 이같이 밝혔으며, "이번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이며 일본은 엄중하게 북한에 대해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납북자 관련 조사를) 시작했으므로 조사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언급함.

6. 국군포로

- 특이 동향 없음.

7. 대북지원

- 정부 "평양아파트 붕괴 민간단체 방북요청 금주 결정"(7/7, 데일리NK)
 -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한국구조연합회(회장 정동남)가 북한 '붉은별 건설총국'으로부터 평양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지원을 요청받았다"면서 "지난 6일 방북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김 대변인은 "아파트 붕괴는 지난 5월 13일에 발생했고 북한이 이미 주변정리가 끝났다고 밝힌 데다 붉은별 건설총국은 지금까지 남북관계에서 초청장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 지연됐다"고 설명함.
 - 이어 "한국구조연합회가 지난달 26일 또다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방북을 하겠다고 요청했다"면서 "상황을 검토한 뒤 금주 중에 승인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앞서 북한은 국영건설회사인 '붉은 별 건설총국'은 지난달 9일 우리 측 민간단체인 한국구조연합회에 구조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북한이 우리의 특정 민간단체에 재난 구호 요청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임.
 - 북한은 이미 현장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된 만큼 방역 소독기 등 재건과 방역 활동에 초점을 맞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WFP 대북식량지원 5개월 연속 축소돼(7/7, 자유아시아방송)
 - 세계식량계획(WFP)은 영양과자와 혼합식량의 재료 확보가 늦어져서 지난 2월 이후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제공



하는 음식량을 대폭 축소했다고 7일 밝힘.

- 세계식량계획의 아시아사무소 실케 버 대변인은 지난 6월 약 60만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에 1천468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전함.
- 이는 한 달 전인 지난5월의84만 명보다 약 24만 명 감소한 것이며, 지난 2월 155만 명에 영양지원을 한 후 5달 연속 감소했음.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3월과 4월 각각 북한 주민 100만 명을 지원했지만 지난 5월에는 84만 명 그리고 지난달 60만 명으로 지원 대상을 줄였음.
- 버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 북한으로 들여갈 곡물을 구입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서 지원 규모 축소의 배경을 설명했다.
-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7월부터 2015년 6월 말까지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등 취약계층 240만 명을 대상으로 2억 달러 규모의 영양지원 사업을 진행했지만, 국제사회의 모금이 부진해 결국 지난달 이사회에서 대북지원 사업의 규모를 3분의 2수준으로 축소하는 결정을 내렸음.
- 이 결정으로 지원을 받는 북한 주민의 수가 2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감소했음.

● 524조치 후 민간 농업지원 방북협의 첫 승인(7/8, 연합뉴스)

- 정부가 천안함 피격사건에 따른 524 대북제재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농업지원 협의를 위한 민간단체의 방북을 승인했음.
- 통일부 당국자는 8일 "월드비전의 이주성 북한사업팀장 등 4명의 개성 방북을 승인했다"며 "월드비전은 내일 개성에서 남북 공동 영농사업에 대한 실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월드비전은 9일 개성에서 북측 관계자들과 만나 2010년 중단된 공동 영농사업 재개 방안과 시기 등 문제를 북측 관계자들과 협의할 예정임.
- 통일부 당국자는 "2010년 524 조치로 순수 인도적 지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중단됐다"며 "최근 순수 인도적 지원에서 벗어나 산림(녹화) 협력, 한옥 보전 등이 남북 간에 (논의가) 진행 중으로 기존의 순수 인도 지원에서 대북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봐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524 조치의 근간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무력화된다고 볼 수는 없고 골격은 유지하면서 세부적인 범위에서 운신의 폭이 넓어졌다고 해석해 주면 좋겠다"고 부연함.

● 중국, 100만 달러 대북 식량 지원..WFP 통해(7/8, 미국의 소리)

- 중국이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대북 사업에 미화 10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세계식량계획은 대북 사업을 위해 올 들어 현재까지 4천900만 달러를 확보했음.
-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사무소의 실케 버(Silke Buhr) 대변인은 7일 북한 식량지원을 위한 중국의 기부 사실을 밝힘.
-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어린이집과 탁아소의 영유아, 어린이를 비롯해 임산부와 수유모들임.



- 세계식량계획은 올 들어 현재까지 대북 식량 지원 목적으로 각국 정부로부터 4천9백만 달러를 모금했으며, 이같은 액수는 내년 6월 말까지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사업에 필요한 자금 1억3천750만 달러의 약 35%에 해당함.
 - 세계식량계획은 자금난으로 최근 대북 지원 사업의 규모를 당초 2억 달러에서 1억3천750만 달러로 30% 줄이고, 수혜자 수도 여성과 어린이 24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조정했음.
 - 실케 버 대변인은 세계식량계획이 지난달 북한의 여성과 어린이 60만 명에게 1천468t의 식량을 분배했으며,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700회의 분배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 또한 분배감시 활동에 한국말을 구사하는 요원을 충원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세계식량계획의 요청에 따라 식량이 지원되는 곳에 즉시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을 허가 받았다고 말했다.
 - 또 식량이 지원되는 곳을 임의로 선택, 방문해 분배 상황을 감시하고, 전반적인 식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시장들도 방문할 수 있게 됐다고 함.
- **영국, 지난해 북한에 66만 달러 공적개발 원조 제공(7/9, 미국의 소리)**
- 영국 정부가 지난해 북한에 영어교육 지원 등 모두 15건, 총 66만 달러의 공적개발 원조를 제공한 것으로 집계됨.
 - 영국 외교부는 최근 발표한 2013-2014 회계연도 공적개발 원조 지출현황 보고서에서 북한과 관련해 38만6천 파운드, 미화 66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절반이 넘는 34만2천 달러는 영국문화원이 북한에서 진행 중인 영어교육과 영어교사 연수에 투입됐으며, 영국 외교부가 지난 2000년부터 영국문화원과 공동으로 북한에서 진행하고 있는 북한 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는 영어 교육과정 개편과 교육자료 개발, 영어교사 강습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영국과 북한은 지난달 말 이 프로그램을 2017년까지 3년 간 더 연장하기로 북한 측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음.
 - 이어 북한 적십자사가 비상사태에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구호 장비와 물품을 갖추는데 16만7천 달러, 그리고 두 차례에 걸쳐 북한 관리들을 영국에 초청해 영어연수와 문화훈련을 실시하는데 각각 7만 달러와 4만2천7백 달러를 제공했음.
 - 이밖에도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아시아 장애청소년 경기대회 참가,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대표단의 영국 방문, 국제장애인의 날 기념 평양탁구대회 개최 등 1년 동안 모두 15 건의 공적개발 원조를 북한에 제공했음.
 - 영국 외교부 휴고 스와이어 부장관에 따르면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핵개발과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북한과의 교류를 계속하는 이른바 '비판적 교류정책'을 펴고 있음.
 - 스와이어 부장관은 비판적 교류정책은 북한 주민, 특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영국과 영국의 가치를 알려 고립된



채 남아 있는 것보다 외부 세계와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는 점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EU, 북한 농업생산성 향상에 150만 유로 지원(7/9, 미국의 소리)

- 유럽연합 원조개발협력청은 8일 'VOA'에 보낸 대북 지원 보고서에서 유럽연합이 북한에서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지난 3년간 150만 유로, 미화 약 200만 달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 식량농업기구는 북한 농업성과 국토환경보호성, 농업과학원과 협력해 지난 2012년부터 수확 후 손실을 줄여 식량안보를 개선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음.
- 보전농업 (Conservation agriculture)과 이모작을 통해 수확량을 증대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보전농업은 작물을 바꿨다거나, 덮개 작물을 활용하는 농법으로, 수확량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이와 관련해 식량농업기구는 평안북도와 황해남도 내 협동농장 5 곳의 취약계층 1천500가구, 약 6천여 명에게 보전농업을 전수하고, 수확 후 관리와 저장에 필요한 농업기술과 농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기계 이용법과 보수관리 등 교육도 실시하고 있음.
- 식량농업기구는 수확기와 수확 후에 필요한 농기구인 탈곡기와 제분기, 제면기 등 지원을 늘렸으며, 수확 후 손실을 줄여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국 정부, 평양 아파트 붕괴 구호 관련 민간단체 방북 불허(7/10, 미국의 소리)

- 한국 정부는 지난 5월 발생한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구호와 관련한 한국 민간단체의 방북을 불허했음.
- 한국 민간단체 한국구조연합회에 구조 지원 요청을 한 '붉은별 건설총국'의 실체가 불분명한데다 사고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점, 붕괴 현장에 새로운 건축 작업이 진행되는 정황도 있어 잔해정리, 구조 목적으로 방북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통보했음.
- 한국구조연합회는 지난달 26일, 일부 인력만 방북해 현장 상황을 확인 하겠다고 다시 방북 신청을 냈음.

● 스위스, 대북 인도주의 지원 2년 연장(7/11, 미국의 소리)

- 스위스 외무부 산하 스위스개발협력청(SDC)은 스위스 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5월 초 이사회가 대북 지원 프로그램을 올해 말로 끝나는 '2012-2014 중기 지원 프로그램(Medium-Term Programme)'을 2016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지난 2012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진행해 온 대북 식량 지원과 식수, 위생 사업, 경사지 관리 전수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음.



- 스위스개발협력청은 세계식량계획(WFP)에 분유를 지원하는 사업에 지난 3년 간 1천400백만 스위스 프랑, 미화 1천500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평양과 평안남도, 황해북도 지역에 태양열을 이용한 상수도 시설과 수질정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올해 80만 스위스 프랑, 미화 90만 달러를 포함해 지난 3년 동안 총 230만 달러를 지원했음.
- 또한 산간 지역에 나무와 농작물을 함께 심는 '산간농업'등 경사지 관리 사업에는 총 160만 달러를 지원함.

8. 북한동향

- 특이 동향 없음.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